

## 산자부, 중소·벤처기업 공장설립 승인기간 5일 단축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이 창업해 공장을 지을 때 정부가 승인해 주는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5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시·군·구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해 주는 공장 설립 인·허가 사항이 48개에서 65개로 대폭 늘어나고, '사전심사청구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와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8월 20일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개선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괄의제 인·허가 확대와 함께 창업자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지난 4월 창업실태 조사결과 찾아낸 16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 등과 협조해 범부처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창업기업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신기술창업기업 등 창업기업 보증기관으로 특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대행 서비스는 창업기업의 10% 수준인 4000개까지 확대하고 각 대학에 '창업대학원'을 설치해 창업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 정통부, 중소·벤처기업 정보보호투자비 법인세서 3% 공제

중소·벤처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3%가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등 중소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중소기업이 예산 부족과 보안 인식 결여로 인터넷 침해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해킹, 바이러스의 중계지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IT 전공 미취업자 80여 명을 선발, 교육을 실시한 뒤 2400여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해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하는 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 중기청,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혜택 제공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의 주요 주주간 구조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구주 주식교환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M&A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벤처특별법 하위규정인 '벤처기업주식교환요령'을 제정·고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번 요령에서는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의 주요 주주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익실현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한 다른 기업의 주요 주주가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기청에 신청하면 그 주식교환 내용을 확인해 신청자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세제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